

한국사 서술 방향의 '표준화' 시도와 그 문제점

최병택*

(공주교육대학교)

The Characteristics to Establish Guidelines in History Textbooks

ByungTaek Choi*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third national curriculum had the characteristics to establish guidelines in history textbooks with the basic direction to implement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At that time, the object of the history education was 'the harmon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s and national development' which was the same that the authorized government aimed at. But the characters and the purpose were repeated without any criticism. Since the third national curriculum was presented in Korean education, the aims of education proposed the 'Korean style democracy'. Essential aims of education are more important than any political issues because academic research is not reflected on nationalism. This trend which is flowing in the education of Korea was strengthened through the education authorities in the statements of 'Deployment of the Governing' or 'guidelines': Especially, the idea and the history education.

Despite the curriculum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these problems are not to be gotten rid of. The recently revised curriculum guidelines for history textbook description should improve and find the way to develop the history thinking of students.

Key words : Korean History Textbook, Standardization, curriculum, adoptive system of the textbook,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I. 서론

현재 각급 학교에서 교수되고 있는 교과목의 학습 내용은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목표와 성취기준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구안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한국사학계에서는 역사 교육과정이 한국사 연구의 중요한 결과물들을 교과

서에 엄선하여 수록하는 것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감이 없지 않았다. 특히 한국근현대사 영역의 경우 1950년대 이후 상당한 정도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고, 그 중요한 성과들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한 노력이 경주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여하히 충실하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로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문적 연구 성과를 축약하여 제시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면적인 기초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육과정은 주로 학문적 측면에서만 교육과정이 구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가 충실히 이루어질 경우 그 역사적 사실이 담고 있는 ‘역사의식’을 쉽게 발견,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되도록 역사학적 연구 결과를 충실하게 소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해당 분야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1970년대 제3차 교육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한다고 하여 학문중심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방향성이 설정된 바 있다는 사실이다.¹⁾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지향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되는 바이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교과서 내용 하나하나가 ‘학문적 권위’를 획득하게 된 모양새를 띠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라고 하여 ‘국민교육헌장’의 주요 내용을 교육과정의 목표로 대폭 수용하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참작하여 ‘국민적 자질의 함양’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역사교육의 목표로 ‘국민 자질’이 제시된 것은 아주 흔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목표의 하위에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라는 하부 목표가 또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시한 다음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은 국민의 총화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²⁾고 적시하였다.

3차 교육과정 이후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 “국민의 총화”라는 뚜렷한 기준이 등장했고, 이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해석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시각에 따른 사건 해석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문적 연구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되어 버렸다. 당시 문교부 당국은 이러한 방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용 전개’의 준거’라는 것을 만들어 발표했다. ‘내용 전개’의 준거’는 교육과정 문서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충돌 문제 즉, 학문 중심적 교육과정과 ‘국민교육헌장’이라는 특수한 시각에 따라 구성되는 교육과정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준거’에 따라 특정 시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었으며, 그 시각이 교과서에 담기게 됨에 따라 해당 영역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해석은 국가의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 바

1)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육과정(해설서)」(1973)

2) 위의 자료

같이 배제될 수 있었다.³⁾

이후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없어지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내용 전개의 준거' 및 그 뒤를 이은 '집필기준'을 제시할 때 1) 학문의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의 타당성 문제 2) 역사가의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준거'의 결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인정 교과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가운데에서 검인정 체제를 주장하는 논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개되지 못했다. 본 발표자는

이러한 인식에서 '내용 전개의 준거' 서술 경향을 살피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내용 전개의 준거' 혹은 '집필기준'을 역사 '표준화' 시도라고 묶어 개념화하고, 이러한 '표준화'가 미친 영향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내용 '준거'의 등장과 그 영향

1973년 2월 문교부는 “많은 연구 인력이 참여할 수 있게 개인이 아닌 다수의 학자가 공동 집필함으로써 …(중략)… 객관성 높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역사 교과서의 '준거'인 '국사의 중심 개념'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이 문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특정 정치 집단이 내세우고 있던 정치적 가치를 은연 중에 지지하고, 그것을 '정사'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교육당국이 제시한 '준거'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① 대한제국 시기에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외세 간섭과 파쟁으로 실패했다고 서술할 것 ② 3.1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민족의 총역량을 결집'하여 거족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고 서술할 것 ③ 이승만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정치적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서술할 것 ④ 4.19 혁명 이후 '자유'를 추구하는 흐름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서술할 것 등이다.⁴⁾

위 준거는 교과서 내용의 범위 또는 서술의 수준과 같이 실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서술될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여 학습자들에게 주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교과서는 전문적인 학문 성과를 교육 철학 혹은 교수학습 기법의 측면을 고려하여 재조직,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3차 교육과정에서는 오직 '우리 실정에 맞는 민

3) 안병우(2004).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시비에 대한 역사연구단체들의 의견서. 역사교육92. 역사교육연구회
4) 국가교육강화위원회(1973). 「국사의 중심개념」

주주의'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고, 위의 준거도 이러한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준거들이 교과서 서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에 당시 교과서 서술 내용을 간단히 축약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① 대한제국은 열강의 간섭을 불식하지 못하였고 정권 내부의 보수적 파쟁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일본을 꺼리어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에 있으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미·영·프 등 경운궁을 에워싼 외국 영사관에 의지하려는 태도도 보였다.

② 3·1운동은 민족의 저력을 국내외에 과시하였고 일제에 동조하던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중략)… 도 한국의 민족 독립운동을 국내외의 거족적인 항쟁으로 유도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끝내는 빼앗긴 조국을 우리 손으로 다시 찾는 성업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은 민족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민족이 대동단결해야만 가능하다는 정신적 태세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③ 오늘날과 같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는 때일수록 과거 문화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하여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을 확고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우리 전통에 담겨 있는 민족의 저력을 발견하여 높은 수준의 국민적 자각을 가지게 하며 새로운 문화의 건설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기 때문이다. …(중략)… 민족정신의 현대적인 확립과 경제적인 자주성의 확립은 사회의 혼란과 문화적인 후진을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 민족의 영원인 남북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 부분, 대한제국에 대한 서술에서는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상적 혼란”으로 ‘근대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식으로 해석을 덧붙이고 그에 맞게 내용을 배치하였다. 외세 간섭, 보수적 파쟁이라는 개념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황제권 강화라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민적 단결’이라는 가치를 ‘정치적 독재’와 교묘히 연결짓는 식의 서술은 3·1 운동과 같은 독립운동 관련 서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당시 국사 교과서는 3·1 운동의 의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민족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민족이 대동단결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서술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각 세력이 ‘사심없이 대동 단결’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근현대 부분 역사 서술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역사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논할 때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사안이다. 혹자는 역사 교육이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다소 객관적으로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라는 분야는 절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해석을 지향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역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가치관이며, 특정한 ‘내러티브’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논할 때, 공공적인 지적 자산으로 기능해야 할 교육과정도 무언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성 혹은 해석의 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돌아보면 1970년대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해석의 틀'을 특정 정치 집단이 일방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국사의 중심 개념'이라는 문서이며, 이후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제시된 편찬준거, 집필기준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편찬준거나 집필기준은 역사를 하나의 특정 역사관으로 해석하게 하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점에서 필자는 이 문서들이 역사 '표준화'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역사 '표준화'를 위한 문서들은 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당시 정권의 시각에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역할을 했다. 이 문서의 해석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재편되었으며,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활발하고 자유로운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이후 발행된 국정교과서는 '민족 단결'을 마치 '우리에게 맞는 민주주의'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내용을 구성해나갔다.

이러한 문제점은 검정 체제가 도입된 후의 '준거'에서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도 보인다. 4차 교육과정 시기 준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었다.

3. 근대 사회의 성장

1) 민족 의식의 성장과 근대 문물의 수용

(1) 흥선 대원군의 정치

- ① 조선 후기의 봉건적 모순과 실학적 개혁이 상충하는 시기에 집정한 대원군의 위치를 이 해시킨다.
- ② 대원군의 개혁 정치의 내용과 그 한계를 설명한다.
...(중략)...

4. 독립 운동의 전개와 발전

1) 독립운동의 강화와 3·1운동

(1) 일본 제국주의의 특징

- ① 일제의 병탄을 설명하면서 근대화가 늦었던 자기 반성을 가지도록 한다.
- ② 일제의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어 도·군·면을 지배하면서 3권을 직접 행사하고, 그때까지 동리 중심의 자치 기능이 성장되고 있던 민족 역량을 면 중심으로 개편하여 파괴해 버린 점 등을 설명한다.

- ③ 토지조사사업으로 40%를 넘는 국토를 빼앗아 간 점을 비롯하여 수산업·광산업 등을 침탈한 것, 그것을 위하여 회사령으로 민족 기업을 봉쇄했던 것 등을 설명한다.

(2) 3·1운동

- ① 그 동안의 독립 운동을 원류로 한 그 결실로서의 3·1운동을 설명한다.
- ② 세계사와의 관련에 주의하고, 해외에서 만주의 대한 독립 선언·미주 국민회의 활동, 상해의 신한청년당, 일본의 2·8독립 선언을 종합한 국내의 계획으로서 3·1운동을 설명하고, 그것이 다시 해외 동포 사회로 확대되어 간 점 등을 설명한다.
- ③ 모든 계층, 모든 종교가 참여한 실례를 들고 전 민족 운동으로 전개된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5. 현대 사회의 발달

1) 민주주의와 민족문화의 발전

(1) 민주주의

- ① 4·19를 민주주의의 자유 혁명의 성격에서 설명하고, 국민의 역량을 인식하게 한다.
- ② 4·19와 더불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부상한 것을 설명한다.
- ③ 과도 정부의 상황과 제2공화정의 정부 형태와 사회 상황을 설명한다.
- ④ 4·19 후에 자유주의 이념을 현실적으로 조직화하지 못한 민족적 반성점을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2) 제5공화정의 성립

- ① 제3공화정의 장기 집권과 유신 체제를 설명하면서 제5공화정이 성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 ② 제5공화정의 정치·경제를 설명한다.

위에 제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4차 교육과정기의 ‘내용 전개의 준거’는 이전과 달리 단원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교과서 서술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않았지만 ‘내용 전개의 준거’는 분량이 늘어나고, 규정하고 있는 단원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게 바뀌었던 것이다.

또 3차 교육과정 시기 ‘내용 전개의 준거’에 보이던 가치 지향적 서술도 상당 부분 삭제되었다. 물론 “4·19 후에 자유주의 이념을 현실적으로 조직화하지 못한 민족적 반성점을 이해하도록 설명한다”거나 “일제의 병탄을 설명하면서 근대화가 늦었던 자기 반성을 가지도록 한다”라고 하여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다고 상정된 일종의 ‘교훈’을 임의적 시각에서 주입하려 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교과서 단원 내용의 범주를 설정하는 식

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이처럼 4차 교육과정의 '준거'와 3차 교육과정의 그것과 외형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상 큰 차별이 없었다. 기존의 국정교과서가 지니고 있던 이른바 '권위있는 서술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야 했던 상황이었던 셈이다.

2) 내용 '준거'가 지니는 영향력의 감소 경향

역사 '표준화' 문서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서술이 줄어들어 1994년에 발표된 6차 교육과정의 '준거' 때부터였다. 6차 교육과정 당시의 '내용 전개'의 '준거' 중 현대사 2단원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민주주의의 시련과 진전

(1) 4월 혁명과 자유 민주주의

- ① 4월 혁명의 배경으로 정치적 조건과 함께 경제적인 면도 설명하고, 3·15 부정 선거는 국헌 파괴 행위였음을 지적한다.
- ② 마산에서의 제1차, 제2차 의거에 이어, 4월 혁명은 학생이 중심이 되었으며, 4·19 이후에 시민이 가세한 혁명이었음을 설명한다.
- ③ 4월 혁명은 부정, 불의, 억압에 대한 항거였으며, 기본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 혁명이었다는 점, 그와 함께 민족 통일, 민족 자주를 지향한 것이었음을 설명한다.

(2) 5·16 군부 쿠데타와 민주주의의 시련

- ① 5·16은 일부 군부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였고, 이후 2년간 계엄령 하에서 헌정이 중단되고 군정이 실시되었음을 설명한다.
- ② 한·일 회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 시기에 국력이 강화되어 갔음과 동시에 3선 개헌 등 장기 집권 추구가 진행된 것을 설명한다.
- ③ 1971년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박정권은 장기 집권을 계획하여 국헌이 파괴된 채 유신 체제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한다.
- ④ 유신 체제의 붕괴 이후, 일부 군부 세력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는 과정과, 이 시기의 민주화 운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갔음을 설명한다.

(3)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진전

- ① 1987년 6월 민주 항쟁은 4월 혁명을 이어받은 것으로, 우리나라에 자유 민주주의의 틀을 확고히 제시하였음을 설명하고,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을 서술한다.

- ② 6월 민주 항쟁에 이어 여러 사회 집단, 단체가 민주화되고, 자율화되어 민주 사회가 진전되어 감을 설명한다.
- ③ 세계 냉전 체제의 해체화 과정과 북방 정책 등 한국 외교의 확대 과정을 서술한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을 서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여러 사회 집단 및 단체가 민주화, 자율화되어 가는 과정을 부각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이 역시 특정 세력에 치우친 서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총론에 “역사의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새 문화 창조와 자유 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도록 한 것은 적합성이 비교적 컸다고 할 수 있겠다.⁵⁾

사실 ‘내용 전개’의 준거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상세하게 학습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굳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문서일 수 있다. 그러나 ‘내용 전개’ 또는 ‘집필기준’을 없애는 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장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내용 전개’의 준거’ 혹은 ‘집필기준’은 어떻게 서술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더 실효성을 가지는 질문일 수 있다.

역사 ‘표준화’를 위한 문서들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역사교육의 기본방침과 내용에 기반하여 이를 보다 상세화하고 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유의 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준거’가 실효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살표(가)의 과정, 즉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야 한다. ‘내용 전개’의 준거’가 민주주의 교육의 방향을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기본방침을 구현함에 있어 교과마다 우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를 중심으로 양적 혹은 질적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⁶⁾

이런 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7차 교육과정기 한국근현대사 과목의 ‘준거’는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시기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 체제로 발행되었으며, 국정 체제로 발행된 국사 교과서에는 근현대 부분이 상당히 소략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한국근현대사 ‘내용 전개’의 준거’의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1)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5)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1)’(1992.10)

6) 이돈희(2004). 「교육내용의 적정화, 왜, 무엇을 어떻게?— 교육 내용의 적정화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3-7.

- ①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하에서도 국내에서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등 비밀 결사의 조직과 활동, 무장독립군의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금 활동 등이 전개되었음을 설명한다.
- ②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서 1차 세계대전의 종전, 민족 자결주의의 제창, 중국 상하이에서의 신한청년당의 활동, 동경유학생의 2·8 독립선언, 천도교와 기독교계의 독립운동 준비 등을 설명한다.
- ③ 3·1 운동의 전개 과정을 발발, 주요 도시로의 확산, 농촌지역으로의 확산 등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아울러 운동의 주체 및 거족적 독립 운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④ 3·1 운동은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간도, 연해주, 미주 지역까지 확산되었음을 알게 한다.
- ⑤ 3·1 운동은 민족의 독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무장 투쟁과 외교 독립 운동, 대중 운동 등 민족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 ① 6·25전쟁 후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과정과 정권 말기의 반독재 운동, 3·15 부정선거 등에 대해 설명한다.
- ②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혁명의 주체와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
- ③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면 내각의 정책과 그 한계성을 아울러 지적한다.
- ④ 5·16 군사정변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정변의 주체 및 그 성격을 서술한다.
- 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 및 월남 파병, 근대화 정책 등을 서술한다.
- ⑥ 유신체제의 성립 배경과 정치구조를 설명하고, 유신체제 하의 정치·경제·사회 변화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서술한다.
- ⑦ 유신체제의 붕괴와 신군부의 등장 및 전두환 정부의 집권 과정을 서술한다.
- ⑧ 이른바 신군부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한다.
- ⑨ 6월 민주항쟁과 그 이후에 진행된 민주화 과정에 대하여 서술한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 시기 '준거'는 '준거'가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식의 기술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에 적시된 '영역별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는 한국근현대사 과목 3단원인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부분에서 3·1운동과 관련하여 "3·1 운동의 전개 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하고 비폭력주의가 점차 무력 저항주의로 변모되어 갔음을 이해한다",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민족사적 측면과 세계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준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3·1 운동의 전개 과정을 발발, 주요 도시로의 확산, 농촌지역으로의 확산 등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아울러 운동의 주체 및 거족적 독립 운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1 운동은 민족의 독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무장 투쟁과 외교 독립 운동, 대중 운동 등 민

족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라고 서술하였다.

7차 교육과정시기의 ‘준거’는 그 양이 적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 ‘준거’에서는 내용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내용의 양적 수준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7 교육과정 이래 조금씩 개선되었다. 2007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전개’의 준거가 ‘집필기준’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서술도 간명해졌다.

7. 민족의 수난과 독립운동

1)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배경을 민족자결주의 등 외인을 강조하는 경향과 민족의 주체 역량 등 내인을 강조하는 경향을 모두 고려하여 서술한다.

민족 대표 33인의 역할은 논란이 많으나 초기 조직 단계의 역할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3·1 운동의 주도층으로 청년층, 학생층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운동 후기로 갈수록 농민이나 노동자, 상인 등이 주도층으로 등장하였음을 염두에 두도록 한다. 3·1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보여준 잔인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3·1 운동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를 서술한다. 1930년대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활동을 서술하면서 건국 강령 제정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결성하고, 중국 관내 민족 운동 세력을 통합하였음을 유의하여 서술한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 운동의 역사는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2) 국내 민족 운동의 전개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을 서술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특정 계열을 정통 노선으로 설정하고 다른 노선은 민족 운동 범주에서 제외하거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서술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균형 있게 서술한다.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이 다양한 노선과 사상 위에서 전개되었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8.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1)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

4·19 혁명은 장기 집권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부정 선거 등에 맞서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그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한계를 서술한다.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 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4·19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군사 정부를 세웠음을 기술한다. 이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하여 1인 장기 집권 체제가 성립되었음을 다룬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 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함께 설명한다. 유신 체제가 무너진 뒤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군사 정부의 성립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

2)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다루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한 새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서술한다. 이후 독재 정치 아래서 억압되었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신장되었음을 유의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수준으로 제시하고 평가는 유보한다.

요컨대 '내용 전개의 준거' 혹은 '집필기준'은 교육과정 적정화 제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 국정교과서 발행체제기에는 '내용 전개의 준거'가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 및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역할을 하면서 교육 철학을 둘러싼 자유로운 논의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1 역사 교육과정의 집필기준과 관련된 논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⁷⁾ 향후 만들어질 기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2015년 '집필기준안'을 둘러싼 논란

최근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역사 집필기준안도 발표되었다. 이 안은 국정교과서 발행 방침 발표와 함께 현재 재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름도 '편찬준거'로 수정될 전망이다. 아직 편찬준거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집필기준안을 중심으로 향후 발표될 '기준'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서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자.⁸⁾

7) 이성호(2012). 2011년 역사교육과정과 집필기준 논란 자료. 역사와 교육5. 역사교육연구소

8) 이 글에서 소개하는 2015교육과정 집필기준은 2015년 9월에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수록, 발표된 것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1910년대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과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을 살펴보고, 3·1 운동과 이를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한다.

【집필 방향】

- 1910년대에 일제가 폭력적인 무단통치를 통해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였다는 점을 서술한다.
- 1910년대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을 소개하고,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서술한다.
- 3·1 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그 의의를 설명한다.

【집필 유의점】

- 일제가 지세 제도를 정비하여 식민 통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실시하였다는 데에 유의한다.
- 191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을 서술할 때에는 독립 의군부, 대한 광복회, 신홍 무관 학교,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 ㉠3·1 운동 당시의 독립 선언서에 제국주의 침략을 비판하고 평화 공존을 주창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추진한 징병, 징용,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전시 수탈과 우리말 사용 금지 등 민족 말살 정책을 파악하고, 1930~194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과 건국준비 활동을 이해한다.

【집필 방향】

- 1930년대에 접어들어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고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 병참기지화 정책과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 물자로 수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이후부터 1945년 전쟁에 패배할 때까지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 로 끌고 가 여성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서술한다.

【집필 유의점】

-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을 설명할 때에는 한국 독립당과 조선 민족 혁명당이 힘을 합쳐 광복을 준비했다는 데에 유의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여러 독립 운동 단체의 활동을 맥락적으로 연결지어 설명함으로써 독립 운동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4·19 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집필 방향】

- 4·19 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5·16 군사 정변, 유신 체제의 성립 등의 정치 변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흐름을 설명한다.
- 정치 변동과 민주화 운동의 결과 나타난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을 설명한다.
-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4·19 혁명 이후 전개된 여러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었음을 서술한다.

2015 교육과정 집필기준안은 몇가지 점에서 다소 특징적이다. 먼저 밑줄 친 ㉠과 같이 3·1운동 관련 서술 부분에서 국정교과서 발행 당시에 언급되었던 '거족적 독립 운동'론이 삭제되어 있다. 또 "개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근대 문물 수용에 따른 사회 변화를 탐구한다"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집필기준에 과거 국정교과서 당시에 부연되어 있었던 '과쟁' 문제가 삭제되어 있다.

밑줄 친 ㉡과 같이 민주화 운동을 거쳐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정치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강조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정화 비판논자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 교과서에서는 "국민을 권리와 인격의 주체로 자각시키는 시민 교육"이 기본적 가치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육과정의 기본적 목표를 여하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결여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해방 후의 독재 정권이 시민성의 어떤 부분을 약화시켰는가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혹자는 '친일 독재의 역사와 무관치 않은 세력이 역사를 은폐하기 위하여 국정화를 시도' 하는 만큼 집필기준에 친일 문제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3차 교육과정 이래의 국정교과서를 살펴볼 경우 친일을 미화하는 식의 서술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항일운동의 여러 움직임을 '한국적 민주주의'와 일부 연동될 수 있는 '전민족 단결론'에 따라 평가하는 서술이 많아졌고, '당파성'의 해악을 부각시키며 특정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식의 논리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사실상 역사의 '표준화'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역사 '표준화'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담거나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정치적 입장을 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집필기준이나 편찬준거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를 폐기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역사 서술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 요소들과 그 요소들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3차 교육과정 시기 이래 제시된 여러 역사 '표준화' 기준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수이다. 기존 교과서 서술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곧바로 집필기준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집필기준을 이용하여 기존에 문제를 안고 있던 부분의 서술 내용을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의 형식을 거쳐 수정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위에 소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과 집필기준은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분 긍정적으로 기능할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⁹⁾ 그러나 이 기준은 기존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작성된 것이 아니었고,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부 내용 요소의 수정 방향을 제시한 데에 그쳤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보다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9) 국사편찬위원회,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Ⅲ. 결론

‘내용 전개의 준거’가 어떤 방향으로 교과서 서술을 규정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되돌아볼 때, 집필기준안에 독립운동 관련 내용을 더 많이 넣도록 하는 문제와 민주주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는 별개일 수도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특정 정치, 종교 세력의 입장을 집필기준안에 포함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시도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집필기준(최근 ‘편찬준거’로 바뀌었음)은 교육과정의 기본적 방침을 교과서에 적정하게 구현하는 데에 있어 그 방향을 규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집필기준이 바람직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성숙될 필요가 있으며, 역사 교육에 있어 민주주의 교육이 그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연구자 사이에서도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필기준을 이용하여 기존에 문제를 안고 있던 부분의 서술 내용을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의 형식을 거쳐 수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집필 기준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한중(2011). 중등 역사교과서 개편의 과정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64. 한국고대사학회
- 안병우(2004).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시비에 대한 역사연구단체들의 의견서. 역사교육92. 역사교육연구회
- 이성호(2012). 2011년 역사교육과정과 집필기준 논란 자료. 역사와 교육5. 역사교육연구소
- 이인재(2012). 역사교과서의 미래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 황해문화74. 새얼문화재단
- 이춘구(2011).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민주주의 논쟁 중심으로. 법학연구34. 전북대법학연구소
- 주진오 외(2004).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집필기준과 검정시스템. 역사교육92. 역사교육연구회

국문 요약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역사 교과서 서술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다. 당시에 제시된 역사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라는 것으로 권위주의 정부가 지향하던 ‘한국적 민주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교육의 성격과 목표는 이후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비판을 받아본 적 없이 되풀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3차 교육과정 이후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 “국민의 총화”라는 뚜렷한 기준이 등장했고, 이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해석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시각에 따른 사건 해석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문적 연구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되어 버렸다. 이 경향은 교육 당국이 발표한 ‘내용 전개의 준거’ 혹은 ‘집필 기준’을 통해 강화되었다.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고정되었다.

교육과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집필기준은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일부 교과서 서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시도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제어 : 역사과 집필기준, 역사과 편찬 준거, 국민교육헌장